

3D프린팅으로 기관포 부품 등 혁신 K-방산,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 기대

산업부-국방부, 국방분야 기술협력 방산부품 공급망·산업 생태계 구축 핵심부품 제작 기술력 확보 등 기대 MRO 기술, 선박 부품 제조 지원

정부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엔진, 추진기, 기관포 부품 등 방산 분야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3D프린팅 관련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방부와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2017년에도 3D프린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 부품 제조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단종됐거나 조달이 어려운 군함, 전자 등의 부품을 대체해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고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을 지속·연장하고, 보다 고도화된 국방부품 제조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부품 수요 발굴 및 실증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데이터 베이스 구축 ▲부품 공급망 및 산업 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핵심부품 제작을 위한 기술력 확보는 물론, 3D프린팅 부품 활용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도 기대되며,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부가 축적해온 R&D, 인프라, 인력 등의 자산과 국방부, 생기원의 역량이 결합돼 다양한 성과 창출이 예상된다"며 "또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3D프린팅 업계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이번 협약은 국방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의 확대 적용과 군의 자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의 자체 제작능력 확보를 추진해 전투장비 가동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D프린팅의 소재·부품·장비·공정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3D프린팅 관련 디지털 전환과 운항 선박 내 유지보수 부품 자체 제조를 위한 3D프린팅 융합 실증기술(MRO)도 지원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그린바이오’ 기술로 농업 혁신 본격화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육성법 시행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돼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그린바이오 기술을 사용해 농업과 농업 관련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이 대표적이다.

이 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법이 도입됐다. 5개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고제 도입,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요건을 갖춰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등이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령에 담겼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공정위, 허위광고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앞으로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20%) 요건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와 심의 단계에 협조한 경우를 나눠 각각 과징금을 10%씩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조사·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 제도를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역통상 불확실성 여전... 수출 총력 지원”

안덕근 산업장관, 인천신항 방문 무역금융 360조 등 수출 지원 예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일 “올해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새해 첫 행보로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글로벌 고급리·고환율,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이 방문한 인천신항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이자 2년 연속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하며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 중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1월 5일 취임 직후에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물류 거점인 평택항을 방문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녹색지 않은 대내외의 수출 여건에도 수출원팀 코리아로 (지난해) 우리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의 굳건함을 보여줬다”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의 투톱인 반도체는 최초로 1400억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는 2년 연속으로 700억달러 이상

의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류 열풍의 기회로 K-푸드(농식품) 수출은 역대 11월말 누적 기준 최대인 90억달러,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최초로 10억달러를 기록했다.

안 장관은 올해 우리 수출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하고,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수출상담회 등 수출지원에 역대급인 2.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활용한 한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협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4000여개 ‘평생교육기관’ 정보 첫 공시

온국민평생배움터서 확인 가능

올해부터 초·중등과 고등 학력을 인정하는 국내 4000여개 평생교육기관도 일반 대학처럼 수업료와 전임교원 현황 등 교육 인프라 정보가 공시된다.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 책무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개정된 평생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평생교육기관 정보공시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삼성전자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LH토지주택대학, 포스코기술대학 등 4개 사내대학과,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등 2개 원격대학을 비롯해, 백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등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학

위인정시설을 포함해 4066개가 있다.

최초 공시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 공시 자료를 수합해 일괄 공시됐다.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하게 된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매해 5월, 9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4월, 6월, 8월, 10월) ▲그외의 평생교육시설(5월)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돼 있으며,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해당 정보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2429만톤

환경부, 유엔 제출 통계 확정 전 분야 전년 대비 2.3% 감소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전 분야에서 감소해 전년 대비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

출량을 7억2429만톤(t)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배출량인 7억4098만t 대비 1668만t(2.3%) 감소한 수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냉장·냉방기기의 냉매가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량 증가로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과 피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에서 2021년 대비 약 280만t(9.5%)이 증가했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지침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을 적용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